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-47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4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#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##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5146호, 2018.5.29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(안 제13조)

현재는 보험회사·채신관서·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

요한 보험업·우체국보험사업·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

#### 나.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(안 제21조제2항)

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·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

#### 다.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(안 제24조의2)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,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, 여신전문금융회사, 대부업자 등으로 함

#### 라.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(안 별표3)

현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허가 등과 관

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

**마.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(안 별표4)**

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,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신용정보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신용정보팀)

- 주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- 전화 : 02-2100-2621
- 팩스 : 02-2100-2629
- 이메일 : [ujoh@korea.kr](mailto:ujoh@korea.kr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정보마당/법령

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